

이덕일의 '역사의 창'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

1909년 가을, 매천 황현(黃鉉)은 전라도 구례에서 서울로 향했다. 중국으로 망명했던 김택영이 귀국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택영은 이미 재출국했고 황현은 이견방·이건승 같은 양명학자들과 강화도로 가서 이견창의 묘소를 찾았다. 황현은 이견창을 위로하는 오언을 지었다. '외롭게 누웠다고 슬퍼하지 말 것을/ 그대는 살아서도 혼자가 아니었던가(無事無憂獨在日離群)'. 절창이었다. 황현은 귀로에 서울 남산에 올라가 대궐을 굽어보며 통곡했다.

이듬해 나라가 망하자 '난리 속에 지내다 머리가 세웠네/ 몇 번이나 버리려던 목숨이구나'라는 절명시(絶命詩)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황현이 남긴 '매천야록'은 그가 스스로 끊은 목숨 만큼이나 날카로운 붓으로 시대를 비판한다. '매천야록'은 고종이 스스로 노론(老論)으로 자처하면서 대교에 급제한 사람이 노론이면 '친구(親舊)'라고 부르고, 소론이면 '저쪽 편'(彼邊), 남인·북인일 경우에는 '그놈(厥翁)'이라고 비하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고종이 친구로 여긴 노론의 마지막 당수 이완용은 친구와 민족을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먹었다.

황현 자결 직후 이견방·이건승 등의 양명학자들은 만주 망명길에 올랐다. 그러나 속의 끝에 이견방은 남아서 조선 양명학을 전수하기로 하고, 이건승은 망명해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견방은 국내에서 정인보 같은 양명학자 이명자 역사학자를 배출했고, 이건승은 망명해 극도의 궁핍 속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그런데 이견승이 자리 잡은 곳은 만주 유하현 횡도촌(橫道村)이었다. 만주의 작은 마을 횡도촌에는 이견승뿐만 아니라 충청도 진천의 양명학자 정원하도 있었고, 서울에서 집단 망명한 우당 이회영 일가도 있었다. 경성도 안동에서 망명한 석주 이상룡, 백하 김대락 일가도 모였다.

필자는 전국 각지의 독립운동가들이 모인 곳이 횡도촌이란 사실에서 전국적 규모의 집단 기획 망명이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1911년 봄, 노천 군중대회를 열어 자치 조직인 경학사(經學社)

를 만들었으며 그 부설로 신흥무관학교를 열었다. 신흥무관학교는 군사 교육 외에 역사 교육도 병행했는데, 그 중에서도 고대사를 중시했다. 민족의 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독립 전쟁에 나설 수 있는 원동력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이상룡이 지은 '대동역사'(大東歷史)가 교재였다. 이 책은 남아 있지 않지만 이상룡이 망명하면서 쓴 망명 일기 '서사록'(西徙錄) 등의 기록을 보면 그 내용을 추측할 수 있다.

현재까지도 쟁점이 되는 것이 한(漢)나라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설치했다는 한사군(漢四郡)의 위치다. 조선총독부는 한사군의 중심인 낙랑군이 지금의 평양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국사가 식민지로 시작한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서였다.

이상룡은 일제가 이런 역사 왜곡에 나설 것을 알았다는 뜻이 '한사군은 모두 요동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1962년 리지린의 '고조선 연구'를 출간하면서 '낙랑군-평양설'을 폐기시키고 '낙랑군-요동설'을 채택했다. 그러나 남

한의 강단 사학계는 북한이 56년 전에 이미 폐기 처분한 '낙랑군-평양설'을 이른바 '정설'이라고 떠받치고 있다. 북한이 남한을 식민지라고 비판했던 근거 중의 하나가 조선총독부 학살을 추종하는 '식민 사학'이었다.

현 정부는 석주 이상룡의 옛 집인 임정각을 복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건물 복원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이상룡의 역사관을 복원하는 일이다. 우리 사회 적폐 중의 가장 오랜 적폐는 아직도 조선총독부 역사관을 추종하는 식민 사학 적폐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많은 국민들은 현 정권이 식민 사학을 청산하고 석주 이상룡과 단체 신재호 등의 역사관을 복원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행정권 들어 식민 사학자들은 제 세상 만난 듯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바로 이런 말과 행동의 불일치가 공수처 실종 등 지지부진한 개혁 진행 상황과 함께 현 정권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장>

의료칼럼

사상 의학과 수기치심(修己治心)



류기준 중앙생한방병원장

은 사상 의학을 통해 많이 알려 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상 의학은 기존 전통 의학의 철학적 바탕이 되었던 도가와는 달리 철학적으로 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연의 여러 존재들은 생존을 위해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반면, 인간은 우주적 이념에 해당하는 '인(仁)'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仁)'에 이르기 위한 윤리,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등의 근원적인 물음이 더욱 강조되어 있는 것이 사상 의학 정신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상 의학을 창시한 동무 이재마 선생은 사상인의 개인적인 특징을 통해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 마음을 다스리는 법, 처세를 하는 법 등의 모든 장르를 다루었다. 인간을 육체적으로는 장기의 대소(大小) 관계로, 정신적으로는 항심(恒心)과 심욕(心慾)으로 구분해 몸과 마음이 불안정한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각 체질의 취약점을 보완하면서 평생 성정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절하면서 생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즉 인간은 선

천적으로 예외 없이 성정의 편차에 따라서 네 가지의 서로 다른 체질로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이 적용되는 법이 아닌 한 결을 더 나아가 개체의 특이성을 중요시하는 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이재마의 주장은 동의수세보원 등의 여러 부분에서 볼 수 있다. 주된 내용은 외부 환경이나 육체보다는 정신을 더욱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고, 이는 결국 치심(治心)하는 심신의학적 차원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체질에 맞게 음식을 가려먹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체질에 맞지 않은 음식이나 약을 장기간 복용 하였을 때 상당한 부작용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자신의 삶이 자신의 체질을 잘 유지 하느냐 혹은 외부 자극에 의해 자신의 체질이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행동이나 태도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외부 자극에 의해 변화된 행동과 태도는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 원래의 선천적인 체질과 현재의 차이로 인해 변화된 부자연스러운 행동이나 태도를 검토하고, 체질과 비교판단해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를 생각해보는 것이 먹는 거 못지않게 중요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상 의학에서는 인간의 착한 본성을 인(仁), 의(義), 예(禮), 지(智) 네 가지로 보고 이를 심적(心的) 차원에서의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봤다. 반면 이에 대비되는 나쁜 마음을 무례함(鄙心), 천박함(薄), 탐욕(貪), 나태함(懶)으로 여겼으며 이를 심적 차원에서의 완벽하지 않은 인간상으로 봤다. 이러한 네 가지 착한 본성과 나쁜 본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체질적 특성을 잘 알고 착한 본성은 계발하고 갈고 닦으며 나쁜 본성은 경계하고 멀리하는 것, 즉 수기치심(修己治心)이 건강한 삶을 사는 척도라 보는 것이다.

사상의학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찌 보면 단순할 수 있다. 모든 병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그 치유 또한 마음에서 시작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신체화된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즉 '중용'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역시 일상의 건강에서 중요하다고 했다.

기고

지방 분권은 지역 소멸을 극복할 에너지원이다



박상일 지방분권전남연대 수석상임대표

지역 소멸 먹구름은 지난 8월 '국가 통계 포털'의 주민등록인구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2017년 6대 광역시 가운데 인천을 제외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지방 대도시의 인구가 전년보다 줄었다. 광주는 2014년 최대 인구인 147만 5884명 이었으나, 3년 사이 146만 745명으로 내려앉았다.

지방 대도시들의 인구 감소는 수도권 유출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2017년 감소 인구 중 85.2%가 수도권으로 유출됐고, 광주는 감소 인구 5444명 중 95.2%인 5184명이 수도권으로 떠났다.

산업연구원이 11월 25일 발표한 '지역 소득 역외 유출의 결정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로 유입된 소득은 연간 62조 3000억원이었다. 서울과 경기도가 타 지역에서 번 엄청난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비수도권 지역의 유출 폭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뜯어보자면 지역 소멸 흐름이 해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고, 농어촌 중소 도시

에서 지역 대도시로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 소멸 요인은 노령화, 저출생 보다 인적·물적 자원의 지역 외 유출이 더 큰 문제로 나타났다. 만약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쓰나미가 발령되면 사람들이 그 지역을 앞 다퉈서 탈출하듯 머지않아 지역 탈출 러시가 일 것이다.

갈수록 나라 꼴도 말이 아니다. 세계 10위 무역 강대국이지만 행복 지수는 56위, 행복감 지수는 118위라 할 정도로 국민 행복과 역주행하는 모습이다. 갈수록 일자리가 말라가고 사회 갈등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가 보여주듯 위기 관리가 지극히 허약한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지역이 되살아나고 나라 난맥을 타게 할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서울 일극의 나라, 중앙 집권의 나라 틀을 지방 분권으로 바꾸는 게 답이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나라, 지역 사회 공동체 복지를 활성화시켜 따뜻한 복지를 이루는 나라, 지방 자치를 통해 절차 민주주의와 사회 안전망

을 튼튼하게 세우는 나라, 남과북 지역들이 평화 통일 물꼬를 트는 나라가 지방분권 국가이다.

그럼에도 광주·전남에선 지방 분권에 대한 관심이 낮다. 광주·전남이 중앙으로부터 소외되었기에 중앙의 자원을 많이 가져와야만 굶은 등이 퍼질 거란 기대 때문이다.

일부 지역 정계나 엘리트들도 지방 분권이 균형 발전의 적인 양 호도하고 있다. 이런 논리는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자치 발전을 역행하게 만든다.

중앙 의존적 의식은 지역 창의력을 떨어뜨리고, 주민의 삶의 질과 동떨어진 토목 개발 방식을 양산하여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이젠 지방 분권을 지역 재생의 적극적인 기회로 수용해야 한다. 지방 분권은 지역 창의성의 불륨을 키우고, 지역들이 상상 경쟁하는 포지티브섬 게임에 불을 지퍼 줄 것이다. 또한 '-모드'의 늪에 빠진 지역을 '+모드'로 전환시키고, 주민의 행복도를 극대화시켜 줄 것이다.

社說

'광주형 일자리 타결' 끝까지 상생의 정신으로

임금을 줄여 고용을 늘리는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이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 협상이 타결된 데 이어 지역 노사민정의 공동 결의까지 이끌어 낸 것이다. 다만 노사민정 의결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임금협상 유예 조항이 변경되면서 현대차의 최종 수용 여부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광주시는 어제 오후 시청에서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불참을 선언했던 유종해 한국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의장도 참석해 노사 상생 발전 협정서, 적정 임금 관련 부속 협정서, 광주시 공동 복지 프로그램 등의 안건을 가결했다. 임금 수준은 주 44시간에 3500만 원을 기준으로 신설법안에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임금 체계를 결정하기로 했다. 자동차 생산 규모는 연간 10만대로 규정했다.

하지만 지역 노동계가 반발해 온 노사 상생 발전 협정서 제1조 2항이 논란이 됐

다. 신설 법안의 임금 협상을 생산 목표 대수 35만 대 달성 때까지 유예한다는 내용이 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논의 끝에 이 조항 전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광주시는 이 같은 결정 사항을 현대차에 알리고 재협상에 들어갔다.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 협약식은 오늘 오후로 예정돼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일자리가 없어 절망하며 수도권 등지로 떠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기 위해 민선 6기부터 추진됐다. 사업이 성사되면 직간접 일자리 1만2000개를 만들 수 있고 국내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일자리 창출 모델을 다른 도시에도 확산시킬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현대차의 결단이다. 임금협상 유예 조건을 제외하고 적정 임금, 적정 근로 시간, 원·하청 개선, 노사 책임 경영 등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진 만큼 상생의 정신으로 현대차의 노사민정 의결안 수용을 지역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다.

건설사 반발한다고 도시미관 포기할 건가

광주시가 건설 불경기를 이유로 또다시 도시 경관이나 광주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초 시는 상업지역 내 무분별한 고층 아파트와 오피스텔 복합 주거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뒤늦게 지역 건설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단계적 실시'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광주시는 최근 "광주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내부 논의 결과 점진적으로 적용하자는 의견이 있어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례 개정안을 서둘렀던 광주시는 최근 이용섭 시장과 광주상공회의소 회장단과의 면담 이후 단계적으로 도시경관 조례를 추진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수년간 논의 끝에 입법 예고, 법제 심사까지 마치고 광주시의회 상정 절차만 남았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다

시 손질하겠다는 얘기가. 오랫동안 공론 과정을 거쳐 결정한 사안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려고 드는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업지역 내 무분별한 주거용 시설의 증축을 방지하기 위해 상업시설의 규모를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상업지역에 순수한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권장하되 아파트를 짓기 위해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상업시설 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미다.

사실 근래 광주의 도시 경관은 가슴이 탁막힐 정도로 답답하다. 주변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하늘로 치솟은 고층 아파트와 건물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미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이다. 무릇 도시의 품격은 아름다운 건축물과 쾌적한 보행 환경에서 나온다. 시는 일부 건설 업체의 수익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관철시켜 광주의 정체성을 살려야 할 것이다.

無等鼓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세습'이라는 말이 당연한 것처럼 들리고 있다. 돈·지위·권력은 물론 이제는 일자리까지 아들로 손자로 이어지는 시대가 됐다. 마치 유럽의 왕족이나 귀족의 작위처럼 혹은 봉건 시대의 계급처럼, 한 번 정해진 것들이 그대로 대물림되는 것이다. 여기에 노력도 없이 단지 그렇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중요한 무엇인가를 얻는 이들의 품격 없는 언행이,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스트레스 지수도 높이고 있다.

그들의 품격

금수저인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 이들이 자리를 계속 이어받으니 평범한 이들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탈락자의 수는 늘어나고 그들의 한숨과 불만은 쌓여만 간다. 누구나 자신의 것만 고집하다 보니 대중·공공의 의미는 퇴색하고, 눈앞의 이익을 탐하다 보니 먼 미래에 대한 관심 역시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모두의 위기가 시작된다.

과장된 듯하지만 이는 이미 과거 상당수 국가들이 겪었던 바다. 멀리 로마의 전성기는 고위층의 봉사와 기부·헌납으로 가능했다. 그것은 전통이었고 자발적·경쟁적이었으며 의무이자 명예로 인식

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고위층에 권력이 집중됐고,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결국 로마는 멸망했다. 지금의 선진국인 영국·미국·프랑스·독일 등에서도 부유층이나 고위층의 전쟁 참여, 기부, 봉사, 회생 등이 그 밑바탕에 있었다.

대조적으로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고위층·부유층의 앞뒤 가릴 것 없는 '갑질'이 횡행하고 있다. 열 살짜리 초등학교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 등 세대 구분 없는 이들의 천박한 말투나 행태에서 그들이 찾고는 도저히 찾아보기 힘들다. 예외법정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인식에서부터 저급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 같은 고위층·부유층들의 이면을 보면서 '귀족에게는 의무가 있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거창한 말은 차마 꺼내지도 못하겠다. 하지만 가진 자들이 주변이나 자신의 아래에 있는 평범한 이들에 대해 최소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면, 언젠는 자신이 가리고 싶은 것마저 곧 드러나고 말 것이라는 점은 잊지 말았으면 한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여 론 채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경 영 지 월 구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FAX 02-773-9331)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